

건설동향브리핑

제463호 (2014. 6. 2)

■ 경제 동향

- 1~4월 주택시장, 인허가·분양·준공 모두 증가

■ 정책·경영

- 북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업계의 과제
- 단기 거주에는 임차, 장기 거주에는 매수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

■ 정보 마당

- 글로벌 건설기업 리스크관리 체계의 시사점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세월호 참사와 집단 이기주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1~4월 주택시장, 인허가·분양·준공 모두 증가

- 인허가·분양은 수도권, 준공은 기타 지방에서 증가 -

■ 인허가 : 수도권·기타 광역시 아파트 중심 증가 지속

- 주택 인허가 실적은 13만 5,98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7% 증가함. 수도권이 40.0%, 기타 광역시가 35.9%, 기타 지방은 16.7% 각각 증가함.
 - 수도권에서는 인천(77.0%)·경기(61.0%)와 아파트의 증가세(아파트 56.4%, 아파트 외 24.2%)가 현저
 - 기타 광역시의 아파트 외는 감소세(-0.5%)로 돌아섰으나, 아파트(61.6%)의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음.
 - 기타 지방에서는 아파트가 26.1%, 아파트 외가 각각 1.4% 증가. 그러나, 지역적 편차가 커 세종(-54.6%), 전북(-24.5%), 전남(-16.1%), 충남(-12.0%), 충북(-6.4%)은 감소세를 나타냄.

<1~4월 주택 인허가 실적>

(단위 : 호, %)

구분	지역별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전국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지방	전국	수도권	기타 광역시	기타 지방
2014년 1~4월	135,984	57,057	15,700	63,227	7,289	2,029	109	5,151	128,695	55,028	15,591	58,076
2013년 1~4월	106,509	40,764	11,554	54,191	3,955	502	610	2,843	102,554	40,262	10,944	51,348
전년비 증감률	27.7	40.0	35.9	16.7	84.3	304.2	-82.1	81.2	25.5	36.7	42.5	13.1

자료 : 국토해양부

■ 분양 :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물량 증가

- 분양 승인 실적은 전국적으로 7만 9,565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8% 증가함.
 - 전국적으로 일반 분양이 36.0%, 임대가 27.6%, 조합이 147.7% 각각 증가함.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 분양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여 조합 물량이 크게 증가함.
 - 연초 호조세를 보였던 수도권은 65.5% 증가함. 특히, 서울(907.1%)의 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
 - 지방도 29.1% 증가함. 조합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과 임대 분양이 증가함.

■ **준공 : 아파트 35.9% 급증, 전체 주택 증가세**

- 준공 실적은 12만 1,48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0% 증가함. 기타 지방, 아파트의 증가세로 전국적인 증가세 시현
 - 수도권이 13.7%, 기타 광역시가 7.1%, 기타 지방이 34.0% 각각 증가함.
 - 아파트의 준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함. 특히, 기타 지방의 아파트는 64.6%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아파트 외 준공 실적은 전국적으로 2.2% 감소함. 수도권은 3.8% 증가하였으나, 기타 광역시는 16.7%, 기타 지방은 3.7% 감소함.

<1~4월 주택 준공 실적>

(단위 : 호, %)

구분	주택			아파트			아파트 외		
	2013년 (1~4월)	2014년 (1~4월)	전년 동기비	2013년 (1~4월)	2014년 (1~4월)	전년 동기비	2013년 (1~4월)	2014년 (1~4월)	전년 동기비
전국	102,059	121,480	19.0	56,874	77,279	35.9	45,185	44,201	-2.2
수도권	47,322	53,786	13.7	24,827	30,435	22.6	22,495	23,351	3.8
기타광역시	21,073	22,577	7.1	13,445	16,226	20.7	7,628	6,351	-16.7
기타지방	33,664	45,117	34.0	18,602	30,618	64.6	15,062	14,499	-3.7

자료 : 국토해양부

■ **선행지표는 수도권, 동행지표는 기타 지방에서 호조**

- 상반기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분양 실적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상반기 동안 수도권과 지방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내며, 재고 주택시장보다 신규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분양 실적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증가세를 시현함. 또한, 상반기 동안 LH공사의 택지 판매 실적도 증가하여 당분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선행지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2~3년 간 분양 물량이 많았던 기타 지방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준공이 도래하면서 동행지표인 준공 물량도 증가함.
- 다만, 지난 2월의 ‘주택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선행지표의 증가세가 시장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함.

허윤경(연구위원 · ykhur@cerik.re.kr)

북한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업계의 과제

- 면밀한 시장 분석 및 남·북한 당국자 간 협력 체계 구축 필수 -

■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정보의 축적과 공유

-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 관계의 구축과 5.24 조치의 해제 없이는 북한 건설시장에 남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는데, 현 상황에서는 향후 북한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건설업계 차원의 준비가 필요
- 북한 건설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상하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경제특구 개발 방안 등에 대한 연구 필요
 -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 사업이 추진될 경우, 북한 당국에 사회기반시설의 개선 방안과 경제특구의 개발 등을 제안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구축하여야 함.
- 북한 내 시공 경험의 수집 및 분석
 - 향후 북한에서의 건설 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에서의 각종 건축 및 토목공사, 경수로 등 건설 사업에 참여한 시공 및 관리 인력들의 경험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

■ 북한 건설시장 접근에 대한 범건설산업 차원의 지원 시스템 구축

-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발주기관의 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간 기업 단독으로 북한 건설시장에 진출할 경우, 자칫 혼선과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
 - 폐쇄된 사회일수록 발주처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이 건설 수주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자칫 부패 구조를 초래할 수도 있음.
 - 발주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와 합리적인 경쟁을 통한 수주 기회의 확보 필요
- 정부는 북한 당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발주처와 민간투자자시 주무 관청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수주 절차 등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확보하는 것이 필요
 - 남·북한 건설 관련 당국자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후 협의된 내용이 건설업계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북한 내 건설 활동의 효율성 제고

-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임.
 - 개성공단 개발시 법적으로는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단의 개발과 관리 운영은 남한에 위임
- 라선, 황금평·위화도, 13개 경제개발구, 도로·철도·항만 등은 개별법에 따라 해당 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음.
 - 경제특구나 각종 인프라 사업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될 경우, 각 현장들은 북한 전역에 걸쳐 산재할 것임.
 - 각 특구별, 현장별로 개발 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되거나, 인허가 및 인력 조달이 원활치 않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북한의 경제특구, 또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시 개별화된 관리위원회(주무 관청)를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통합 운영하거나, 개별 관리위원회, 또는 발주처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 남·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개발사업통합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북한 건설기능인력훈련센터의 운영 및 활용

- 본격적인 북한 내 건설 활동이 추진될 경우, 건설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숙련공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북한 건설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필요
 -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 장비와 공구의 대부분이 남한 제품들이어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임.
- 건설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 지역(개성공단 등)에 북한 건설 기능인력 훈련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훈련된 건설인력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건설기업들이 진출한 제3국의 건설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

박용석(연구위원 · yspark@cerik.re.kr)

단기 거주에는 임차, 장기 거주에는 매수가 비용 측면에서 유리¹⁾

- 임차 유형 중에서는 반전세가 전세보다 효율적 -

■ 금융 위기 이후 임차시장 쏠림 현상 심화

- 금융 위기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주택 수요자들의 임차시장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2012년 6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연속 하락하였으며, 전세 가격은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금융 위기 이후 2012년에 최저 수준을 나타냄. 반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량²⁾은 2011년에 132.1만 건, 2012년에 132.4만 건, 2013년에 137.3만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 비용의 부담 등이 자리하고 있음.
 - 또한, 매수시 발생하는 비용이 임차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임차가 유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임.

■ 주택 점유 형태별 월 거주 비용 비교 분석시 단기에는 임차, 장기에는 매수가 유리

- 현재의 주택시장과 제도적 여건³⁾을 감안한 주택 매수와 전세의 월 거주 비용 분석 결과, 4년 간 거주까지는 전세가 매수에 비해 월 거주 비용이 적게 들지만, 4년이 지난 후부터는 매수가 전세보다 월 거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남.
 - 4년이 지난 후부터 매수가 전세보다 월 거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임대료 상승분과 임대 보증 수수료 등에 기인함.
 - 과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임대 보증 수수료가 최근 높은 임대료 수준으로 인하여 임대료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면서 매년 보증료를 지불하게 됨.

1) 본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5월 8일에 발간한 「합리적 주택 점유 형태 결정을 위한 주택 매수와 임차의 거주 비용 분석」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 전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 수록되어 있음.

2) 국토교통부가 집계하는 자료로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자료임.

3) 금융 위기 이후의 주택 매매 가격 및 전세 가격의 변동성이 유지된다는 것과 세제(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소득 공제) 및 주택 금융(모기지, 임대료 보증, 전세 대출) 등의 상황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는 가정임.

- 매수와 전세의 월 거주 비용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수, 전세, 반전세의 분석도 단기에는 임차로, 장기에는 매수로 거주하는 것이 월 거주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결과를 보임.
- 또한, 반전세가 전세보다 모든 거주 기간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됨.
 - 전세로 거주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보증 수수료(임대료 및 전세 대출)와 월세에 비해 낮은 소득 공제 등으로 인하여 전세가 반전세에 비해 월 거주 비용이 많이 나옴.

<자기 자본 비율에 따른 주택 점유 형태별 월 거주 비용>

(단위 : 만원)

거주 기간		2년	4년	6년	8년	10년	12년	14년	16년	18년	20년
자기자본비율 60% (1.8억원)	매수	99.7	87.2	83.1	81.0	79.7	78.8	78.3	77.8	77.5	77.2
	전세	57.5	86.6	101.3	112.8	107.6	100.7	96.3	93.5	91.7	90.7
자기자본비율 50% (1.5억원)	매수	117.7	105.2	101.1	99.0	97.7	96.9	96.3	95.9	95.5	95.3
	전세 (전세 대출 0.3억원)	79.7	108.9	123.6	135.1	130.0	123.2	118.9	116.1	114.4	113.4
	반전세 (월세 24만원)	78.4	107.5	122.1	133.6	128.2	121.3	116.8	113.9	112.0	110.9
자기자본비율 40% (1.2억원)	매수	135.8	123.3	119.1	117.0	115.8	114.9	114.3	113.9	113.6	113.3
	전세 (전세 대출 0.6억원)	101.9	131.1	145.8	157.5	152.3	145.6	141.4	138.7	137.1	136.2
	반전세 (월세 48만원)	99.4	128.4	142.9	154.3	148.9	141.9	137.3	134.3	132.3	131.1
자기자본비율 30% (0.9억원)	매수	153.8	141.3	137.1	135.0	133.8	133.0	132.4	131.9	131.6	131.3
	전세 (전세 대출 0.9억원)	124.0	153.3	168.1	179.8	174.7	168.1	163.9	161.3	159.7	159.0
	반전세 (월세 72만원)	120.3	149.3	163.7	175.0	169.5	162.5	157.8	154.7	152.6	151.3

주 : 1) 주택 가격은 3억원이며, 전세 가격은 1.8억원임.

2) 전세는 자기자본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세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것으로 산정함(예 : 자기자본비율이 50%인 경우, 1.5억원은 자기자본이며, 0.3억원은 전세 대출을 받음).

3) 반전세는 자기자본비율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월세 이율 8%로 전환하여 산정함(예 : 자기자본비율이 50%인 경우, 보증금 1.5억원, 월세 24만원임).

■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 점유 형태 결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 금융 위기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은 낮은 상승률을, 전세 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가운데 매수와 임차의 비용 분석 결과는 장기 거주에는 매수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 점유 형태의 결정에 있어 다시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높은 전세 가격으로 인한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 증가로 임대료 보증 수수료 등 새로운 비용의 발생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금리 지원 및 세제 완화 등으로 매수가 임차에 비해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됨.

엄근웅(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글로벌 건설기업 리스크관리 체계의 시사점

- 선진 기업의 리스크관리 체계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

■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은 체계의 일원화로부터 시작

- 2013년, 국내 대형 건설기업들은 해외 사업에서 큰 손실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임. 특히,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분석을 통해 건설기업들의 규모에 적합한 맞춤형 관리 체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2014년에도 700억 달러¹⁾ 이상의 수주 실적이 기대되면서 해외 사업에 대해 사전 예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함.
 - 최근 수주 확대에서 수익성 확보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리스크관리 역량 및 체계에 대한 구체화된 벤치마킹이 강조됨.
 - 수주 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관리 활동을 사업의 전생애주기까지 확대하기 위한 리스크관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함.
-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해외 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량적 리스크 평가 및 추적을 위한 분석 도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과거 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체계의 미흡으로 어려운 실정임.
 - 글로벌 건설기업은 사업의 입찰 정보 입수에서 수주 활동과 계약 이후 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기업의 특성에 따라 체계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업 단위의 리스크관리 체계는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수주 단계에서의 리스크관리 활동은 과거 경험 사례의 데이터베이스를 상당 부분 활용하는 점에서 국내 건설기업들과 다소 차이가 있음.
 - 체계의 일원화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사업의 전생애주기 동안 일관성 있는 리스크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선진 건설기업의 리스크관리 조직, 프로세스, 전산 시스템의 특징²⁾

- 글로벌 건설기업들이 리스크관리 체계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해외 사업의 수주

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kor.icak.or.kr)

2) ENR지 선정 세계 상위 50위권의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음.

및 수행 단계에서 리스크관리 조직, 프로세스, 전산 시스템의 연계 및 통합이 가능한 구조라는 것임.

- 조직 관점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주 활동의 핵심 인력들은 사업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조사됨.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는 상당 부분 표준화되어 있지만, 기업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직과 조화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맞춤형한 후 운영함. 또한, 프로세스의 큰 특징은 사업을 수행하는 실질적 업무의 절차와 프로세스가 일원화되어 있어 리스크 정보의 모니터링과 추적이 가능함.
- 선진 건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전산 시스템의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근 정량적 리스크 평가에 대한 결과물이 발주 요건으로 빈번하게 등장하면서 기존의 시스템과 상용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사업의 특징을 반영해 운영함.

■ 습득 교훈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점진적 접근 필요

- 선진 건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의 역량은 과거의 경험 사례를 통해 습득한 교훈(Lessons Learned)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경쟁력이 향상됨. 특히, 수주 단계에서 리스크 기반의 정량적 수익성 분석은 체계적인 교훈 축적에서 생산됨.
 -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유하기는 어렵지만, 체계적인 리스크 진단 매뉴얼의 구축과 일원화된 리스크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개별 사업 기반의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선결 과제임.
- 국내 건설기업들은 리스크관리 체계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체적인 과거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시급함. 단순히 데이터의 축적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시사점과 통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축적 구조가 필요함.
 - 향후 지능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리스크 데이터 및 정보 분석을 위한 통계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필요함.
 - 이는 방대하고 비구조화된 데이터(빅 데이터)와 통합하여 사업 기획 및 계획 단계에서 최대한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조기 경보 기능의 확보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유위성(연구위원 · wsyoo@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내용
5. 22	건설근로자공제회	• ‘통계연보 제작 관련 전문가 회의’에 건설산업연구실 심규범 실장 참여 - 통계연보 수록 자료 분석 및 의견 수렴
5. 27	한국경제연구원	• ‘글로벌 경쟁력 취약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과제 토론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최석인 연구위원 토론자로 참여
5. 28	금융감독원	• 거시감독국 주최, ‘거시금융감독포럼’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실장 참여 - 최근 거시경제 동향 토의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 ‘건설기계 표준화 세미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연구위원 참여 - TBM(Tunnel Boring Machine)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공유 등
	국토교통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최, ‘자체 규제 심사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5. 29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 ‘해외건설정책자문위원회’에 건설정책연구실 김민형 실장 참여 - 대중소 기업 해외건설 동반 성장에 대한 토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북한 SOC 구축 지원 전략 수립 워크숍’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 - 북한 건설시장 관련 발제와 토의

■ 「201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26일(목) 14:00~17:00,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 제1주제 : 2014년 하반기 건설 경기 전망
(발제자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제2주제 : 2014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
(발제자 :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스페셜 세션 : 미분양 지역 수요자 특성 분석
(발제자 :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문의 : 기획지원팀(02-3441-0883, 0896) ※ 사전 등록 필수

■ 「민간투자사업(BTO/BTL) 추진 일반 과정」 개설

- 일정 및 장소 : 2014년 9월 23일(화)~25일(목),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9층 연수실
- 대상 : 건설기업 SOC 민자사업 담당자, 정부·정부투자기관·지자체 민자사업 추진 실무 담당자, 설계·컨설팅 등 민자사업 관련 업체 및 금융기관 관련 사업 담당자
- 비용 : 45만원/인 ※ 고용보험 납부 사업장의 재직자일 경우 일부 환급
- 문의 : 기업지원팀 교육 담당(Tel.02-3441-0691, 0848),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

세월호 참사와 집단 이기주의

세월호 참사에는 인간의 양심을 마비케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작용했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을 일삼은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 집단의 부도덕한 이익 추구 행위가 여객선 침몰의 궁극적 원인이 되었다. 따지고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장과 선원들의 비양심적인 행동의 이면에도 기업 집단의 이해 관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익 추구를 위한 집단들의 행동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다. 정당성과 선명성을 내세우며 투쟁하는 집단들은 그나마 힘이 없는 집단들이다. 돈과 권력 등에 기댈 수 있는 힘 있는 집단들은 보다 은밀하게 각종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그 결과로서 형성되는 것이 집단 간의 유착 관계이다.

세월호 사건에서도 해운사와 이들의 안전 운항을 감시하고 지도해야 할 기관과 단체들 간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 관계의 정점에는 소위 ‘관피아’라는 관료 집단이 있음도 밝혀지고 있다. 정부 조직과 산하 기관 및 유관 단체, 그리고 기업들 간에 얽히고설킨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모르는 해도 보이지 않는 정치 권력도 깊숙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정경 유착이란 이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말이다.

집단 이기주의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다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사회에서 정경 유착이 심한 이유는 압축 성장 기간 동안 형성된 우리의 문화와 관련이 높다. 성장 지상주의와 결과 중심주의적 사고가 정경 유착을 낳았다. 관행처럼 굳어져 온 연고 지향의 문화가 이를 보다 심화시켜 왔다. 그 결과로 우리 사회는 법과 원칙이 경시된 저신뢰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는 이러한 사회 문화 풍토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세상의 모든 집단은 기본적으로 이익 집단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공익을 추구하는 관료 집단만큼은 그래서 안 되지만 그들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그는 “개인들에게는 이타심과 같은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집단들에게는 오직 정의의 잣대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익 집단들 간의 유착 가능성을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사회의 기본을 지킬 수 있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건설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경제, 2014. 5. 19>

윤영선(연구위원 · ysyoon@cerik.re.kr)